

민방위 교육 주차료 징수 '발끈'

교육생들 "공적 업무에 부과라니"...구청 "무료 개방맨 주차대란"

광주시내 일부 구청에서 민방위 교육을 위해 구청교육장을 찾은 교육대상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교육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구청에서는 민방위교육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민방위교육 소집훈련 과정에서 청사 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교육대상자에게 일반 민원인과 똑같이 주차요금을 부과했다.

민원인의 주차 요금은 1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에는 30분 기본요금 500원에 10분 초과 때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소집훈련 4시간 기준 한 사람당 3천500원(1시간은 면제)의 주차요금이 징수된 셈이다. 북구청 측은 민원인 주차장 부지

(주차대수 158대)가 협소해 교육을 위해 구청교육장을 찾은 교육대상자들이 대거 몰릴 경우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민방위 교육대상자도 민원인에 해당하므로 주차요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대상자들은 민방위 소집훈련의 경우 공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주차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구청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은 김모씨는 "사적인 문제로 구청을 방문한 것도 아닌데, 주차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일반 민원인과 달리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청을 찾은 만큼 주차비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 마다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북구를

비롯 동구(3시간 기준 3천500원)와 남구(3천400원·징수는 광주시 도시공사) 등 3곳이다. 반면 서구와 광산구청은 청사가 아닌 별도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민방위교육을 받게되는 데 구청마다 주차요금 징수 원칙이 다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괄적으로 주차비를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주차장 사정이 다르다. 일괄적으로 무료 요금제를 적용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대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초2부터 인터넷 윤리 교육

지난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상생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예절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육과정에만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비어·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진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사회, 기술·가정, 컴퓨터 등 3개 교과, 고등학교 교과서는 선택과목을 포함해 사회, 정보사회와 컴퓨터, 국어생활, 작문 등 8개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개 교과, 15개 교과로 늘어난다.

다뤄지는 내용은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2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현행 교과서에도 다루지고 있던 하지만 내용을 강화하고 분량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도학숙 입학생 추가 모집

남도학숙이 2008 하반기 입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자는 서울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석사 과정)이어야 하며, 최종학년 1학기 성적평균이 B학점 이상이면 된다. 공고

일(8월1일)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 있어야 한다.

입사 희망자는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에서 입사원서를 내려받아 서류를 작성한 뒤 4~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 남도학숙 장학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문의 02-820-3213~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초·중·고교 보건실 좋아진다

시설 현대화 4억여원 지원

광주시내 초·중·고교 내 보건실이 좋아진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보건실 현대화 및 시설·설비 구입에 4억3천만원이 지원된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보건실 현대화에 나서는 것은 보건실이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위한 1차 진료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 대상인 초등학교 6곳·중학교 3곳·고교 6곳에는 학교당 각각 2천500만원이 투입된다. 노후 시설·설비 개선에는 고교 30곳이 지정돼 학교당 100만원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108개 초·중·고교에 대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보건실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라며 "최근 각 학교 보건실 담당자 연수를 따로 개최해 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한여름 암벽 등반 '광주·전남 등산학교(교장 박상수) 암벽반' 실기교육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지난 2일 한빛의 폭염 속에 70도 경사의 월출산 시루봉 암벽을 오르고 있다. 지난 1979년 지리산에 처음 개설된 광주·전남 등산학교는 올해로 30회를 맞이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일반인 11명을 포함 32명이 참가했다. /영암 월출산=최현배기자 choi@

히말라야 K2 등정 한국인 3명 조난

생사 여부 확인 안돼

히말라야 K2(8천611m)봉 등정 도중 한국인 산악인 3명이 조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3일 경남산악연맹에 따르면 김재수(45) 대장이 이끄는 K2 원정등반대 소속 황동진(45) 등반대장과 박경호 대원(29·이상 경남산악회), 김효경 대원(33·울산산악회) 등 3명은 1일(한국시간) K2 정상을 정복한 뒤 하산 도중 8천200m 지점에서 조난당했다. 당시 이들은 눈치마가 붕괴되면서 눈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하

산하던 다른 국가 원정대원 4명도 눈에 함께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3명과 함께 정상 정복에 성공한 뒤 먼저 하산했던 김재수 원정총대장과 여성산악연맹 소속 고미영 대원은 천만다행으로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해발 8천m 캠프4에 머물러있던 김재수 대장을 비롯한 경남산악연맹 소속 대원 6명이 현재 사고 지점에서 조난자들에게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일 dpa 통신은 원정대 가운데 한국인과 세르비아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목청 키우는 매미

고기암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23~32℃
안남	구름 많음	23~31℃
해운대	구름 조금	24~31℃
부산	구름 많음	23~31℃
대구	구름 조금	22~33℃
대전	구름 많음	22~31℃
충청	구름 조금	22~31℃
전남	구름 조금	23~32℃
전북	구름 많음	22~31℃
경남	구름 조금	23~32℃
제주	구름 조금	23~33℃
울릉도	구름 많음	23~32℃
독도	구름 조금	22~32℃
흑산도	구름 많음	22~28℃

8월 4일 (음 7월 4일)

◇전국날씨

서울: 맑음
부산: 맑음
대구: 맑음
대전: 맑음
전주: 맑음
광주: 맑음
제주: 맑음

날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씨						
최저/최고	24/33	25/34	26/34	25/34	26/34	26/34

'고속도로 오토바이 금지' 또 합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4명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행위의 자유는 물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 김씨 등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도로교통법 제63조(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내린 합헌결정은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쟁의후 징계 최소화' 노사 합의 존중해야

파업 기간 노사가 협상을 벌이면서 쟁의와 관련된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여천NCC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형사책임 및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고 쟁의행위나 그로 인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인사처분을 할 때는 그런 취지를 존중해야 하고 적어도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반성문 취지 시달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 위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하는 내용의 시달서를 쓰게 했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업무 명령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복지관측의 시달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다 견책 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사 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달서가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취지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명령이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태리점 大 모집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생 모집을 위한 태리점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 대상은 19~24세, 고졸 이상 학력, 미혼, 남/여 구분 없이 모집합니다. 모집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태리점입니다. 문의: 02-550-0111

한아름에탁금 6.50%

1년 만기 (연시판매)

저렴한이자율 위한 특별 혜택(대출금리)

-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 6.50%~7.50% 적용
- 신용등급에 따라 연회비 0원~10,000원 적용
- 신용등급에 따라 연이자율 6.50%~7.50% 적용
- 신용등급에 따라 연이자율 6.50%~7.50% 적용

두 임 실험